

세계지방자치동향



자치행정

- (한국) 청년정책 기반 조성:
서울 성동구와 전북 완주군
- (독일) 독일의 새해맞이 문화의 변화

지방재정

- (미국) 지역 내 버려진 공간 어떻게 해야 할까?
볼티모어 시의 대응 노력
- (일본) 일본의 지방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지역 활성화

독일의 새해맞이 문화의 변화

개요

- 새해맞이 문화는 나라마다 다양한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음. 독일의 새해맞이는 질베스터(Silverster)라고 불리는 12월 31일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기간의 여러 가지 풍습으로 시작됨
- 주목할만한 문화는 불꽃놀이와 블라이기센(Bleigießen)인데, 독일의 불꽃놀이는 여타 국가의 새해맞이 불꽃놀이와는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여타 국가에서 그러하듯 지방정부, 기업의 예산이 투입되어 대규모로 화려한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직접 구매한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통해 악령을 쫓아낸다는 오랜 풍습으로 새해를 맞이함
- 블라이기센은 Blei(납)+gießen(붓다)의 합성어로 녹인 납을 물에 부어 그 굳은 모양으로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독일의 전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년운세를 보러 다니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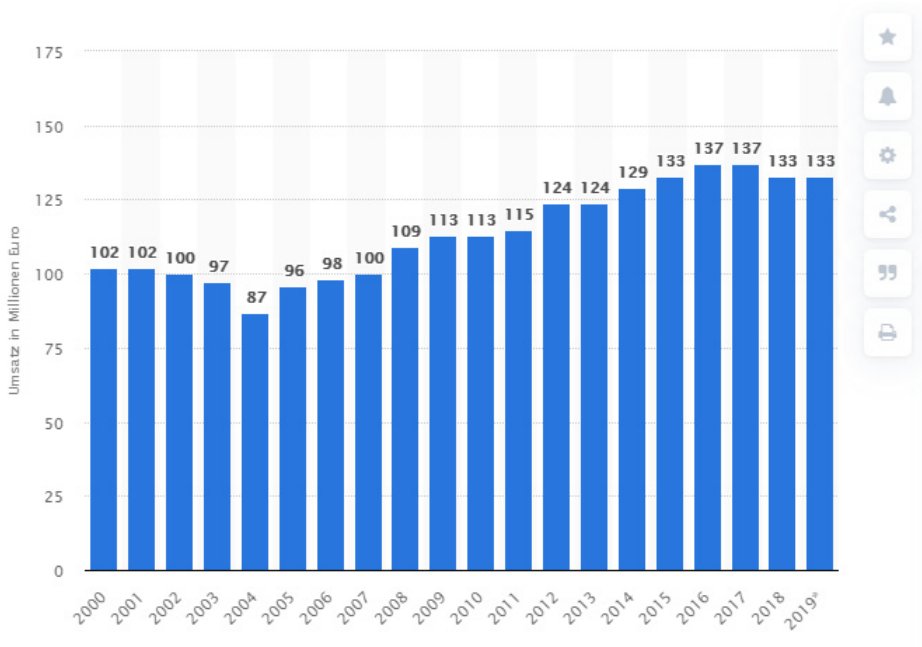


| 그림 1 | 독일의 전통 새해맞이 문화 블라이기센

-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새해맞이 전통이 납을 사용하는 블라이기센의 경우 이미 금지되었고, 불꽃놀이는 도시에 따라 금지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와 과정에 관하여 알아보하고자 함

새해맞이 전통문화의 금지

- 블라이기센에 사용되는 납은 이미 널리 알려진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며, 사용 후 별도로 수거되지는 않는만큼 그 위험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대부터 블라이기센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환경론자,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고, 독일 녹색당이 EU의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부터 납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블라이기센이 직접적으로 금지된 계기는 2018년 4월 EU화학물질법 개정에 따라 일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블라이기센 도구가 판매금지 되면서 부터임
- 블라이기센이 EU의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다면, 새해맞이 불꽃놀이는 ‘시’ 단위의 지방정부 차원의 금지에서 시작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매년 1억유로가 넘는 폭죽 판매량과 불꽃놀이로 인한 연말 미세먼지 증가, 화재 및 건축물 손상과 같은 각종 사고로 인해 독일 사회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져 왔고, 그럼에도 2019년 판매량이 1.33억유로¹⁾(한화 약 1,700억원)에 달하는 폭죽 판매량을 기록하였음



| 그림 2 | 독일의 연말 폭죽 판매량(단위: 백만유로)

출처: Statista(2020), Silversterumsatz mit Feuerwerk in Deutschland in den Jahren 2000 bis 2019

1) 이러한 금액이 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 하루아침에 소비되는 현상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기존에도 연방법률을 통해 2m 이상 폭발할 수 있는 폭죽은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제한이 있었지만, 논란 속에 2019년에는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일부 도시에서는 새해맞이 폭죽을 금지시키거나, Innenstadt로 불리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폭죽을 금지시키는 도시별 규정이 공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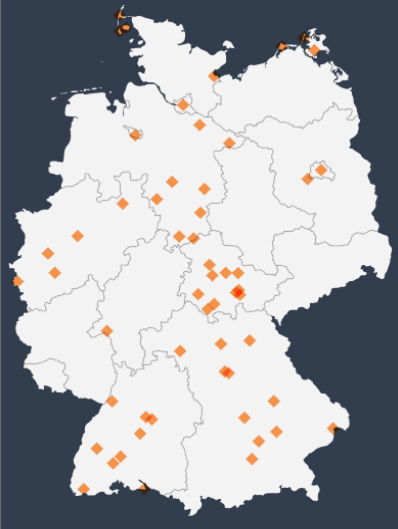
구분	도시	
도시 전체 금지	Amt Föhr-Amrum, Sylt ²⁾	
지정된 구역에서의 금지	Aachen, Augsburg, Bamberg, Berlin, Braunschweig, Bremen, Dortmund, Düsseldorf, Freising, Fürth, Göttingen, Hamburg, Hannover, Ingolstadt, Karlsruhe, Köln, Landshut, Lüneburg, München, Nürnberg, Passau, Stuttgart, Timmendorfer Strand, Wiesbaden, Würzburg	

표 1 | 독일의 새해맞이 불꽃놀이 규제 현황

- 시내의 불꽃놀이를 금지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아헨(Aachen)시에서는 관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내 불꽃놀이 금지 규정을 관보를 통해 공포함

“시내의 구 시가지, 대성당, 시청, 수많은 교회 등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건물들은 많은 경우 지붕 장식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이지만 화재에 민감한 건축자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을 위하여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26일 아헨 시장 필립스

- 위의 규정은 규정화하기 모호한 미세먼지 증가보다는 안전과 공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규제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두 도시 모두 휴양지로 유명한 독일 북부의 섬이다.

결과

- 블라이기센은 EU의 법 개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만큼 납 대신 촛농 등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불꽃놀이가 금지된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내 곳곳에 단속반이 배치되고 1,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과하고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는 등 금지 정책이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남

시사점

- 비록 몇 세기에 걸친 전통문화라 할지라도 독일의 각 지방정부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조례, 규정 등을 통해 금지시키고 있는 추세임
- 독일사회에서 이러한 규제는 시민사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는데, 이번 불꽃놀이 규제는 갑작스럽게 시행되고 정책 홍보의 시간 또한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관점도 있음
- 하지만 2019년 질베스터 이후 다수의 시민사회에서는 전통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성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지방정부의 이러한 규제를 신호탄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20년에는 전국에서 허가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일반적으로 규제는 시대의 환경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비용과 공공의 이익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독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규제가 이에 맞추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있음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